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813
----------	------

발의연월일 : 2024. 10. 22.

발 의 자 : 황명선 · 임광현 · 박홍배  
부승찬 · 김남근 · 김우영  
정태호 · 염태영 · 차지호  
문대림 · 정진욱 · 박정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매년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가 면제되는 사용허가 기간을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더라도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시·도 교

육청이 학교, 공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큰 재정 부담을 지게 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기관과 불필요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 교육청이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면제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 ----- ----- ----- ----- . 이 경우 사용자료 면제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1. 1의2. (생략)	1. 1의2. (현행과 같음)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2. ----- -----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